

다산포럼

대학과 반지성주의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대학 교원 제도는 너무 복잡하다. 조교수·부교수·교수로 불리는 이들은 대개 정규직 전임 교원이다. 강사·외래 교수·초빙 교수·강의 전담 교수·연구 교수·겸임 교수·산학협력 교수·대우 교수 등으로 규정된 이들은 비정규 교수이다. 비정규 교수인 시간 강사는 2019년부터 강사라는 법률 용어로 대체되고, 정규직 전임 교원이던 전임 강사는 2008년부터 법률에서 삭제됐다. 비정규 교수들에게도 연구 조교수, 강의 전담 부교수 처럼 전임 교원 직급을 덧붙여주기도 하고, 일부는 비정년 특임 교원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원체 복잡해서 대학교수조차 전모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나 원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1980년 졸업 정원제가 도입되고 대학생이 폭증한 여파로 1980년대 중후반부터 대학원생도 크게 늘었지만, 1995년 '대학 설립 준칙주의' 도입으로 몇 년 사이 30여 개의 대학이 신설되고 교원 수요도 증가하여 대부분의 학위 취득자는 전임 교원에 안착할 수 있었다. 이때까지 대학에서 비정규 교수는 강사가 대부분이었고, 대개 전임 교원이 되기 전 몇 년 간 겪는 통과역례로 여겨졌다. 급증한 대학 중에 2000년을 전후하여 재

정 파탄을 겪는 대학들이 나오고 대학 내에도 시장 논리가 횡행하면서 다양한 비정규 교수 명칭이 등장하여 전임 교원 직군을 잠식했다. 2018년 교육부에서 주도한 대학 강사 제도 개선협의회에서 비정규 교수 직군을 정리해 보려 했으나, 대학마다 워낙 자의적으로 활용해 오던 터라 체계적 파악조차 불가능하여 전체 31개 명칭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였다. 그 사이 초빙 대우 교수 따위의 명칭이 추가되어 30여 개가 된 비정규 교수 명칭은, 연구자들이 비정규 교수 직군에 장기적 적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표현형이었다. 절망한 비정규 교수들이 곳곳에서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었고, 새삼 비정규 교수의 열악한 처지가 연일 부각되었다. 2010년 조선대 서정민 교수의 유서에는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어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어느 교수의 논문 수십 편을 대필했으며, 거금을 내면 교수를 시켜 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은근히 집착하고 있던 전임 교원과 비정규 교수 사이의 낙차를 충격적으로 각인시켜 주었다. 2010년 4년제 대학의 평균 강의료는 3만 6400원이었고, 강사의 평균 강의 시간은 4.5시간이었으며, 대학은 1학기당 15주의 학사 기간을 운용한다. 이 평균 강의의 연봉은 491만 4000원이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지만, 시간을 많이 뺏기면 연구력을 유지할 수 없고 강의를 계속할 수도 없다. 무간지옥이다. 전임 교원은 강사 배정권은 물론 교원 채용 심사권도 갖고 있다. 불속의 강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굶은 동아줄이었을 것이다. 이성을 잃을 만한 상황인 것이다. 참고로 가장 최

근 통계인 2020년 평균 강의료는 6만 6000원, 여전히 논문 대필과 채용 뇌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35년 발표된 유진오의 '김강사와 T교수'에서 볼 수 있듯 초엘리트들만 교육받던 식민지 시대부터 대학에서는 강사를 착취해 왔지만, 대학 진학률이 70%에 이르는 2022년이 되도록 강사는 노동자로서의 생계는 커녕 직장 건강보험 가입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는 고등교육 정상화를 회피해온 역대 정부의 일관된 무책임이 빚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학 전임 교원들이 조장해 온 일이기도 하다. 강의를 맡길 수는 있지만 동료 대접을 안 해도 되는 비정규 교수들이 지옥에서 견뎌 줘야 전임 교원들은 논문 편 수를 채워 줄 학회지 운영도 떠맡길 수 있고, 연구재단 계획서와 보고서도 떠맡길 수 있고, 잡무에 일질 손대지 않고도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학회 뒤풀이도 저절로 한상 차려지게 만들고, 소장을 맡은 대학연구소도 저절로 굴러가게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논문 자료를 자판기처럼 뽑아볼 수도 있다. 이렇게 낙차를 즐기다가 한 걸음만 더 가면 대필 논문과 채용 뇌물이 기다리는 것이다. 전임 교원들은 대학 안의 기득권에 쫓겨 대학 밖의 세상엔 무심해질 수밖에 없다. 자기 일터에서 강사들이 무간도의 길을 걷고 있는데 못 본 척 연구실 문을 닫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고통에 관심을 갖기가 쉬우랴. 우리 사회도 운동 무한 경쟁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무한 경쟁의 낙차를 즐기는 대학 지성에게 사회가 무슨 기대를 가지겠는가? 반지성주의 역시 대학이 자초한 일이다.

'6·1 선거공감' 기고 <6>

지방선거 후보와 지역민에 바란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

전 세계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이후 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입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았고,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다.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국내 경제와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 생산 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호남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도 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광주·전남의 기업들은 만성적인 인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계속해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발전은 소수의 대기업의 성장만으로 한계가 있다.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착화된 경제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688만여

명의 국민이 이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득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는 '일자리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남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는 2년 연속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크고, 광주 지역 임금 격차도 7개 특·광역시 평균을 웃돈다고 한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정책 및 현안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뽑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거가 아닐 수 없다. 광주·전남 지역의 현실과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도 지자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이다. 지역민 입장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민생 경제는 우리의 삶과 닿아 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현안을 다루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자체와 의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 속에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 등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존폐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제시했던 지역별 공약에 자신들의 비전을 더하고,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중소기업계에서도 중소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한 전

국 공통 과제 31개와 지역 현안과제 24개를 발굴해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역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주요 핵심 과제는 혁신 도시 이전 기관들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근로 환경 개선 지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건립 지원,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구매 제도 활용 및 지역 제품 구매 공시제 도입, 여수 오천산단 특산물 공동 전시판매장 건립 지원,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 순환 특화 단지 조성 등이 골자다. 모두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와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안 과제이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공정한 경제 생태계에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의 삶,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지자체장과 광역·기초의회 후보자들은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희망하는 공약이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 보고 보듬어 주길 바란다. 지난 대선 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국민이 투표를 찾았다. 주권을 향한 그 열정을 다가오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적극 발휘해 주길 바란다. 소중한 한 표를 내실 위해, 또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

社說

선거 확정기 소음 기준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6·1 지방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유세 차량 등의 확성 장치 사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광주경찰청 112센터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틀째인 지난 20일까지 모두 37건의 선거 관련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19건이 유세차 소음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후보나 선거운동원들이 차량 부착용 확성 장치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치면서 소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캠페인 송을 크게 틀어 놓는 바람에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유세 차량 소음 문제가 부각되자 국회는 지난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소음 규제 기준을 신설했지만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자동차 부착 확성 장치의 소음 기준치가 워낙 느슨한 탓이다. 실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음압 기준은 127~150dB인데,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0dB은 전투기 이착륙 때 나

는 소리에 버금간다. 또 110dB은 자동차 경적 소음, 100dB은 열차 통과시 철도 주변 소음과 맞먹는다. 이처럼 소음 규제가 유명무실하다 보니 주민들은 "법이 개정됐는데 달라진 게 없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때문에 못살겠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의 고통에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당국은 선거운동 보장을 위해 적극적일 단속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세 차량 소음 문제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이다. 확성기를 이용하면 다중에게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나, 주민 고통을 유발하는 유세 형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되레 후보와 선거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과 선거 당국은 차제에 법을 개정해 규제의 취지에 걸맞도록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세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율여름 재유행 가능성 만반의 대비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가 율여름 재유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늘고 있는 반면 기존 백신의 면역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광주 342명, 전남 409명 등 모두 751명으로 지난 2월 1일 이후 111일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갔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도 9975명으로 넉 달 만에 1만 명 밑으로 떨어지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감소 폭은 둔화되는 양상이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달 첫째 주 0.72에서 둘째 주에는 0.90로 상승했다. 'BA.2.12.1' 'BA.4' 'BA.5' 등 신규 변이도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가을·겨울께 코로나 19 재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던 정부는 그 시기가 여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새로운 예측을 내놓았다. 김현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본부부장은 브리핑에서 "이르면 율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경 정점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4주간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판정도 인정해 주는 등 방역 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석 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다시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여름철을 앞두고 신규 변이 확산과 백신의 면역 효과 감소, 거리 두기 해제 등 재유행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중첩되고 있다고 하니 절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방역 당국은 4차 집중 대상 확대와 방역 체계 조정 등 만반의 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럽은 물론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잇달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염자들이 원숭이 두창이 풍토병 상태인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한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간단치 않게 보인다. 온몸에 물집이 생기는 원숭이 두창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치사율은 변종에 따라 1~1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람 간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어 이번처럼 빠른 확산세는 이례적이라 평가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이 원숭이 두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스 클루즈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소장은 지난 21일 긴급회의에서 "유럽 지역이 대규모 축제, 파티가 있는 여름철로 접어들고 있어(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세가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스코트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도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원숭이 두창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 사회 전반에 이미 바이러스가 널리 퍼졌음을 시사한다"고 말해 불안감

이 커지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지만 코로나19가 3년째 지속되고 세계의 일상을 뿌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진자는 5억 명, 사망자는 625만 명을 넘어섰다. 언젠가 팬데믹(대유행)은 끝나겠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새로운 전염병이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전염병 포비아'(공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에 따라 인수공통 감염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예언했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치명률과 감염률이 높은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2002년 사스, 2008년 신종플루, 2014년 메르스, 2020년에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유행 사례는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고 있다. 이제 방역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임동욱 이사 겸 선임기자

청춘 특특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김다은 동신대 디지털콘텐츠학과 2학년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영화 '킹스맨'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명대사이다. 매너는 그 사람의 품격이나 성격, 태도, 자세를 의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뜻한다. 너도, 나도, 모두가 매너 있는 태도를 취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아마도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실상은 그렇지 못하며 매너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상식의 테두리에 속한, 이른바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아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침 뱉지 않기, 흡연 구역에서만 흡연하기, 영화관에서 앞자리 발로 차지 않기, 차례대로 줄서기 등등. 사회질서는 공동의 약속을 너도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이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만 좋으면 된다'는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비흡연자를 고려하지 않는 흡연자들의 태도를 보면 그렇다. 아파트에서도, 학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다. 흡연 구역이 있는데도 일부 흡연자들은 아파트 입구 앞이나 학교 건물 앞, 심지어 아파트 화장실과 베란다에서도 담배를 피운다. 집 주변 공원 내 공공 화장실은 담배꽂이와 담배 찌든 냄새로 가득하다. '흡연은 흡연 구역에서만'이라는 상식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나만 편하고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편을 겪게 만든다. 또한 공공이 지켜야 할 질서는 아니지만, 매너가 없어 겪게 되는 불편들도 있다. 흡연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흡연을 하면 담배 냄새가 온 몸에 배게 된다. 특히 불비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도서관과 강의실처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 이 냄새를 맡게 되면 비흡연자들은 머리가 아플 정도다. '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이상 흡연자에게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흡연이 자신의 권리라는 식으로 우겨대는 것이 매너가 아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다. 상대방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잠겨

만드는 것은 매너가 아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도 '나만 좋으면 된다'는 똑같은 기준이라면, 흡연자들의 몸에 뱀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결국 흡연자들의 흡연 권리는 비흡연자들의 암묵적인 배려가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매너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매너와 관련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중국의 고위 관리와의 만찬 중, 음식이 나오기 전 손을 닦으라고 나온 물을 중국 관리가 마시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가 무안하지 않도록 조용히 자신도 같이 따라 마셨다는 것이다. 이처럼 매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당연히 지켜야 하는 도리, 질서를 넘어선 개념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하는 나의 배려 있는 태도와 행동이 바로 매너다. 그렇기 때문에 매너 있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좋은 기분과 호감 이상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상대방에게 대우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매너는 상대방에게 나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대우받을 수 있게 해 주는 태도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매너 있는 사람이 되자. 기본적인 공공의 질서를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매너 있는 지성인이 되자. 그것이 더 좋은 사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 믿는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